위원회 17% "1년에 한번도 회의 안해"…생색내기 운영 비판

전남도 위원회 운영 실태

지역 현안이라도 "안건 없다" 12개 위원회 3년간 안 열려 목포대 교수 14개 중복 위촉 위원 위촉 '정치적' 아닌지…

충분한 인력 풀(pool)을 갖추지 못한건가. 특정 인물들만 선호하는 건가.

전남도의 지난해 170개 위원회 운영 평가를 거쳐 드러난 위원회 운영 실태다. 3년 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0개가 넘었다.

◇지역 현안이라도 '안건 없다'며 3년 동안 안 열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산하 위원회 170개 중 지난 1년 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9개(17%)로 집계됐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최할 안건이 없어 열리지 않은 게 24개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열리지 않은 사례는 5개에 불과했다. 1년 간 한 차례만 열린 위원회가 4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12개나 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심의 안건 미발생'을 이유로 3년 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다룰 만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열지 않았다는 게 담당부서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 생색내기식 위원회 운영 행태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절차도, 권한도 없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서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운 지방대 위기 상황과 버티기 힘들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명칭만으로는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인데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칭만 존재하는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특정 사람들만 위촉하는 이유는=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행태도 엿볼 수 있다. 목포대 교수는 무려 14개 위원회에 위촉 위원으로 활동, 최다 중복 위촉 위원에 꼽혔다. 전남도가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해놓고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10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돼 활동하는 위원도 3명이나 된다. 5개 위원회(13명), 6개(10명), 7개(5명), 8개(2명), 9개(2명) 등 5개 이상 중복 위촉 의원만 35명에 이른다. 이정도라면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조례 취지가 무색한 형편이다. '전남도에 유리한 견해를 대변하는 입장이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나온다.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중복 위촉돼 참여하는 경우 친(親) 전남도적 견해를 대변하는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위원회가 전문가와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하거나 자문을 받는 등 신규 안건을 발굴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폐지·통폐합하거나 안건이 필요할 때만 소집하는 비상설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북구자원봉사센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개시

광주 북구자원봉사센터는 6일 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문인 북구청장, 지산중 봉사단, 동 자원봉사캠프 14개소 등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밑반찬 도시락을 만들어 돌봄이웃 210세대에 전달했다. 〈광주 북구 제공〉

화순 이어 나주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비상

광주 광산구·남구서도 발생 산림당국 긴급 역학조사 나서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남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 함평·화순·나주 등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산림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이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사실을 확인, 긴급 방제체제에 들어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에 의해 확산, 감염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으로, 나주 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이날까지 6그루로 집계됐다.

산림과학원 등은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경로 뿐 아니라 추가 감염목 등이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화순에서도 도곡면 원화리 인근 산림(3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긴급 방제 체제를 가동한 상태다.

산림당국은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담양(2018년·5그루), 장성(2019년·50그루)에 이어 함평(2021년·3그루), 화순 등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데다, 4월 중순부터 기온이 오르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돼 소나무 바깥으로 나가면서 확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미리 최대한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산림당국은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리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현재까지 전남에선 화순과 나주를 포함해 총 13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을 신속하게 제거,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8곳 선정 업체당 최대 1250만원

광주시는 "이달부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노동자에겐 휴식권을, 사업주에겐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게 여건을 조성해 노동인권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올해엔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체에는 이달부터 샤워 시설, 냉·난방 시설, 환기 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체 당 최대 1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양근수 광주시 노동협력관은 "앞으로도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광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스포츠센터, 영화관, 도서 구입, 미용실 등 문화·복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관내 농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연간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812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행복바우처를 지원했다. 바우처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행복바우처 카드는 농촌 거주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직업적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삶의 질 도 높여 농업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접수는 12일부터 22일까지 시 청년정책관실(062-613-2720~1) 이메일(gjyouth@korea.kr)로 하면 된다. 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 대출 추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예정자는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자까지로 완화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0명이 늘어난 180명으로, 상반기 120명, 하반기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자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